

2023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국민·경제·재정 불안 예산안”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현실화한 2023년 예산안을 8.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추경 총지출 679.5조원 보다 △40.5조원이나 감소한 639.0조원으로 편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 대해 경제불안, 재정불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산·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충이 가중되는 예산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고용예산, 경기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고물가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전액 감액되어 내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기보다 불안이 되는 예산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

첫째, 긴축재정으로 경제불안 초래

과거의 경험과 내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경제불안 예산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지출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3년 예산안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추경예산보다 감소하였다(별첨 표1 참조). 2010년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301.8조원보다 △9.0조원 감소한 292.8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제성장률 6.8%에서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6.9%p였는데 공공부문 성장기여도는 -0.1%p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처음 있었던 현상이었다(별첨 표2 참조).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추경보다 △40.5조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010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긴축재정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보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성장 잠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고,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에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및 한국의 2023년 경제상황이 올해 초 전망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3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22.7) : 한국 (4월) 2.9% → (7월) 2.1% (△0.8%p 하향조정)
세계 (4월) 3.6% → (7월) 2.9% (△0.7%p 하향조정)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고물가 등으로 더 어려운 중산서민의 민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말로는 건전재정 기조, 실상은 재정불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지만, 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인한 악순환 효과로 재정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2023년 국세수입안을 보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입기반을 훼손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2023년 국세수입안은 400.5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396.6조원에서 3.9조원(+1.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22.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증가규모가 지나치게 낮다. 정부가 감세로 '23년에 국세수입을 △6.4조원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 국세수입(조원) : ('22추경) 396.6 → ('23안) 400.5 (+3.9조원, +1.0%)
2022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 ('23) △6.4조원

그리고 경제호황기가 아니라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재정의 악순환 효과를 초래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당장에는 건전재정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

경제불안기에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면 내년 경제상황이 정부가 지난 6월 전망한 경제성장률 2.5%, 경상성장률 4.5%에 못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국세수입을 낮게 전망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이 국세수입안을 편성할 때

를 전제로 한 수치보다 낮게되어 국세수입 실적은 정부안 보다 적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은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한다면, 세입기반을 훼손시키고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예산안

2023년 정부예산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기대응 예산이 감액된 모습이어서 민생난이 가중될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하나, 고용분야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고*, 일자리난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는 직접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다.

* 고용분야 예산 : ('22) 31.9 → ('23안) 30.0조원 (△1.9조원)

** 직접일자리 규모 : ('22) 103.0 → ('23안) 98.3만명 (3.2→3.1조원, △4.7만명)

(노인일자리 △2.3만명, 지역방역일자리(한시) △0.7만명, 아동안전지킴이(지방이양) △1.2만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2) 1.0 → ('23안) 0.2조원(신규 신청 중단)

고물가로 어려운 가계를 지원하겠다고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을 4.7조원에서 5.5조원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큰 보탬이 된다고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되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22추경) 0.7조원 → ('23안) - (전액 감액)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예산 대폭 감액되었다. 중소벤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창업 및 벤처 예산은 올해 보다 △6,072억원 감액*되었다. 산업·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는데, 관련된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혁신지원, 지식재산 예산 또한 올해 보다 △1,687억원 감액**되었다.

* 창업 및 벤처 예산 : ('22) 42,397 → ('23안) 36,325억원 (△6,072억원)

** 무역 및 투자유치 : ('22) 9,096 → ('23안) 8,536억원 (△560억원)

산업혁신지원 : ('22) 58,334 → ('23안) 57,396억원 (△938억원)

지식재산일반 : ('22) 3,678 → ('23안) 3,489억원 (△189억원)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 등으로 SOC분야의 투자를 적정화하였다고 하나, △2.8조원이나 감액되어 재정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SOC투자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 SOC : ('22본예산) 28.0 → ('23안) 25.1 조원 (△2.8조원)

한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6,910억원 감액*되어 해당 분야 지원이 후퇴하였는데,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야였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감액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신규로 217억원이나 편성하고 있다.

* 문화예술 : ('22본예산) 41,423 → ('23안) 39,933 억원 (△1,490억원)

체육 : ('22본예산) 19,303 → ('23안) 16,118 억원 (△3,185억원)

관광 : ('22본예산) 14,496 → ('23안) 12,261 억원 (△2,235억원)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민생지원은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지원사업은 증액하려다 보니, 일자리창출과 경기대응 예산 등은 대폭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3년 예산안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아픔과 불안이 되는 모습이어서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023년 정부예산안 대응방향

더불어민주당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은 2023년 예산심사 대응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3년 예산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다.” 며 “재정은 국민에게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2. 8. 30.



<별첨> 정부예산 총지출 추이,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표1> 예산 기준 총지출 추이(단위: 조원,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

연도	본예산	(증가율%)	추경	(증가율%)	연도	본예산	(증가율%)	추경	(증가율%)
'08	257.2	(8.5)	262.1	(10.8)	'16	386.4	(2.9)	398.5	(6.2)
'09	284.5	(10.6)	301.8	(17.3)	'17	400.5	(3.7)	410.1	(6.1)
'10	292.8	(2.9)			'18	428.8	(7.1)	432.7	(8.0)
'11	309.1	(5.5)			'19	469.6	(9.5)	475.4	(10.9)
'12	325.4	(5.3)			'20	512.3	(9.1)	554.7	(18.1)
'13	342.0	(5.1)	349.0	(7.2)	'21	558.0	(8.9)	604.9	(18.1)
'14	355.8	(4.0)			'22	607.7	(8.9)	679.5	(21.8)
'15	375.4	(5.5)	384.7	(8.1)	23(안)	639.0	(5.2)		

<표2> 한국 경제성장률, 공공·민간부문 성장기여도(% , %p)>

연도	경제성장률(%)	성장기여도(%p)		연도	경제성장률(%)	성장기여도(%p)	
		민간	공공			민간	공공
'08	3.0	2.4	0.7	'15	2.8	2.0	0.8
'09	0.8	-1.5	2.3	'16	2.9	2.0	0.9
'10	6.8	6.9	-0.1	'17	3.2	2.5	0.7
'11	3.7	3.6	0.1	'18	2.9	2.1	0.8
'12	2.4	1.8	0.5	'19	2.2	0.7	1.6
'13	3.2	2.2	0.9	'20	-0.7	-1.8	1.1
'14	3.2	2.8	0.4	'21	4.1	3.4	0.7

* 자료 : 한국은행